

사무총장 최재성 카드... 새정치 갈등 '뇌관' 터지나

내년 총선 공천 핵심 자리 '범친노' 추진

비노 "비주류 향한 선전 포고" 강력 반발

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혁명적 새 신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히려 계파 갈등이 확산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친노 성향의 김경협 의원의 '비노는 새누리당 세자' 발언 때문에 이어 문재인 대표가 범친노 진영의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 카드로 제시하면서 친노-비노 진영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여기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자 등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 당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혁신위 출범에 맞춰 탕평에 방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당직 인선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표가 지난 14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범친노' 3선의 최재성 의원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참석자 일부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회의는 3시간 30분이나 계속됐으며, 격론이 오가면서 중간 중간 큰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범주류의 강기정 정책위원장 유입도 탕평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당의 쇄신 방향이나 내년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사무총장직에 문 대표가 특정 계파 인사를 앉히려 한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한명숙 대표 체제 아래서 사무총장과 전략홍보본부장을 '범주류'가 차지,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비노 진영 인사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노계가 푹푹 뭍쳐 최 의원을 지원했다"며 "최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은

사실상 비주류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공천 불이익' 발언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혁신위 상견례 자리에서 김경협 의원의 '새누리당 세자(간첩)' 발언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의 '혁신위원들은 문제인 대표의 전위부대', 박지연 의원의 '당내의 분당 및 정당 준비'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런 말들이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당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잣대를 세우겠다. 공직 선거는 물론 당직 인사에 있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비노 진영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경우, 반혁신으로 몰려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비노 진영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정 의장의 제안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문구 '요구' → '요청' 바꿔...청와대 거부권 행사면 파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수정 최종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여야가 이날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강제성' 여부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안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개정안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강제성을 뺐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의 통

해 위한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원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원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크게 반발해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결재를 급히 요청받자 "종이 한 장 가져다주며 야바위꾼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태도가 정말 참관하다"며 "충분한 설명이나 절차 없이 법사위 결재를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간병비 대부분 건강보험서 부담 추진

새누리당이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3대 비급여(선 택 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건보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 간병문화의 개선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편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

고 있다"면서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간병수요가 대량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 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도 크게 늘고, 이는 다시 건보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경주일보 ☎062-222-8111

김상곤 "막말·분열, 해당행위...공천·당직 인선 불이익"

새정치 최고위-혁신위 상견례서 기강 확립 강조

박지연 "내 말이 막말?...분열 막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막말과 분열을 해당행위로 규정, 공천 및 당직 인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는 등 '혁신과 반혁신의 싸움'을 선언했다. 또한,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혁신 인사'를 주문했다.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문재인 대표에게도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혁신

을 위한 '기강 잡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혁신위원회의 상견례에서 마치 기 다했다는 듯 최근의 당내 분란을 질타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해당 발언을) 막말과 분열의 예로 든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차례 통함·단결해 승리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 막말 분열이라면, 분열을 막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비하고 있다"는 박지연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불신과 분열의 막말'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혁신위원회의 상견례에서 마치 기 다했다는 듯 최근의 당내 분란을 질타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친노계인 김경협 수석사무총장의 '새누리당 세자' 발언을 비롯, "혁신위원들은 문제인 대표의 전위부대 같다"는 조경태 의원 발언, "현재 새정치 내 최소 4대 그룹에서 분당 및 신당창당을 준

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당내 혼란과 분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세력의 문제라 할 수 없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뒀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재성 의원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의미가 포함된 말은 아니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게,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일부 당원들이 최근 트위터에서 '세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수석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1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리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1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 건물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